

이주시대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함께 사는 삶

강정숙(원혜 교육학연구소)

1. 한국 이주민의 상황 : 다양성과 비동질성

2003년 7월 현재 약 6백만 명의 한국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 이는 남한 전체 인구의 11%가 되는 수치이다. 독일에는 약 3만 명의 한국인이 산다. 무작정 ‘한국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단순히 국적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판단될 수는 없다.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이주민은 상이한 체류상태와 이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생활환경 및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삶의 계획과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하는 데 비해, 3세대의 어린이는 독일을 고향으로 여긴다. 어떤 한국 사람들은 이곳 독일에 일을 하기 위해 왔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도 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은 저마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실현시켜야 할 각각 다른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의 삶의 다양성을 섬세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독일에 사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타자성의 경험과 그로 인해 야기된 갈등들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근본적인 주제로서 관통되어 있다. 모든 이주와 망명은 당사자들과 가족의 사회적인 삶에 하나의 강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타자성에 대해 끊임없이 마주치면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문제 이외에도 1세대 한국인들의 삶에서 ‘잔류와 귀환’이라는 문제는 중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사자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직접

제기하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나 혹은 감추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독일 사회로부터의 압력을 느끼기도 한다.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서 생각지도 않게 받는 질문, 예컨대 “너는 언제 돌아갈 거니”라는 질문은 한국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들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한국인들은 다른 모든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3가지 방식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 사회적·경제적인 차별대우
- 피부색, 종교, 문화 등에 근거한 집단적인 차별
- 정치적·법적인 차별대우

많은 이주민들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의 체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법이나 국적법에 의해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비 EU 시민들에게는 지자체 선거권마저도 없다. 오늘날 8백만의 주민에게 참정권이 없다면, 독일에서의 민주주의는 여성참정권이 도입되기 이전인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주민들의 상황은 평균 이하이다. 이는 실업자 통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2004년도에 외국인들의 실업률은 20.5%(일반적으로는 10% 미만)에 달했다. 실업상태인 외국인의 ¾은 직업교육을 마치지 못했다. 일반 독일 청소년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비율은 2005년도의 경우 58%였던 데 비해, 이주민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4%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외국인 실업자들은 독일 실업자들보다 더 젊었다. 2003년도 터키인들 중 35세 미만 실업자의 비율은 49.1%에 달하였다.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인종주의와 외국인적대주의와 부딪힌다. ‘주변에서 중앙으로’라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연구는 인종주의적 입장의 전개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보여준 수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 특히 바이에른 지방에서의 심각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42.4%의 바이에른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적대적인 말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독일 전체 평균은 26.7%), 16.4%가 반유대주의를 표명

하였으며(독일 전체 평균은 8.4%), 또한 독일 전체 평균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위험을 상대화시켰고(8.1% 대 4.2%), 국수주의도 바이에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34.2%로 독일시민의 전체 평균인 18.3%보다 훨씬 만연해 있다.(『취드도이체짜이통』 2006년 11월 10일자)

Shell 청소년 연구에 의하면 58%의 청소년들이 독일로의 이주가 더 적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한다(Gensicke 2006:170).

그러므로 83%의 독일 내 이주민들이 독일보다는 자신들의 출신국에 대해 더 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영국에서 소수집단 사이에서 이러한 입장의 비율은 단지 19%에 지나지 않는다. 40% 이상의 독일 내 이주민들은 독일 정치보다는 출신국의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데, 영국에서 이 비율은 4%에 불과하다(Rommelspacher 2002:166 쪽에서 인용).

이주민들은 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 커뮤니티 건설에서 고립까지
- 잠재적으로 더욱더 차별받는 집단이나 더 열악한 상황의 사람들(예컨대 망명신청자)과 스스로를 구분지음.
- 젊은 이주민들이 고유의 문화를 찾아 이슬람에 경도됨.
- 부분적으로 탈선적인 행동

2. 상호문화적인 공동의 삶을 위한 다양한 기획과 정치

1)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각각의 종족 집단과 문화집단을 하나의 폐쇄적인 단위로 간주한다. 이들은 다른 문화 집단이나 종족집단과의 교류 없이 고유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한 집단들 간의 동등한 공동의 삶이 아니라, 중앙 권력 밑에 다양한 집단들을 조율하는 것이다(오스만제국에서 소수민족들 그리고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게토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유지하였다). Eibl Eiblsfeld 는 이를 통해 독일의 원주민의 문화와 이주민의 문화가 동등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주는 양쪽 편의 이해관계를 볼 때 거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다문화주의가 ‘병렬사회’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걱정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몇 년 전부터 ‘독일의 주도 문화’라는 개념이 매년 선거운동에서 출현하고 있다.

동질적인 독일 문화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사회학자들은 독일에서 사회적 위치와 기본 정향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환경의 유형 집단들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주민들은 이 모든 유형 집단에 속해 있으며, 이 집단의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주민들은 무엇보다 소비 물질적인 유형 집단과 사회적 위치로 볼 때 하층에 속하는 전통적 집단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종족에 대한 소속은 사회적 계서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주민들 중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지향적인 유형 집단에 속하기도 하며, 일부는 교육을 통해 자유주의적 지식인 유형 집단까지 상승하기도 하지만, 기득권 유형 집단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종종 독일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수용을 제안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주도문화에 대한 논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뮌헨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약 30%의 주민과 40% 이상의 학생들이 이주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 민족적인 주도문화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문화의 다양성은 미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문제와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형태 및 운용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도 속한다. 다문화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의 기득권층의 다수는 그들의 헤게모니를 방어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주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타날수록 그리고 사회적 자원에서 그들의 몫을 주장할수록, 기득권층은 더욱더 그들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의 다수층은 타자를 더욱더 극적으로 타자로 몰아가며, 문화 간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병렬사회와 주도문화에 대한 논쟁에서 보수적인 입장들의 배경에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급진적이며, 극복할 수 없는 균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여기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작업이 변경불가능하게 확고한 경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된다. 타자성을 하나의 경계구분선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방식은 종종 정체성의 전쟁을 그리고 가끔은 실제 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오늘날 전쟁과 갈등은 대부분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한 결과들이다.

2) 자유주의적 입장은 보편적인 정치적 원칙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관점을 대변한다. 다른 모든 것은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 입장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리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공적인 것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예컨대 공휴일의 지정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위르겐 하버마스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법질서의 중립성과 종족의 통합을 구별하고 있다. 그는 소수 집단을 위한 특별규정(‘종의 다양성 보호’)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수민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법질서의 내용도 모든 집단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

3) 상호문화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다양성의 단초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교육적인 맥락에서뿐 아니라 무엇보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적용되어 왔다. 다양성의 단초에서는 한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는 성, 성적 취향, 신체에 대한 조건, 언어, 종교, 종족/민족, 정치적 입장, 사회적 위치, 나이, 직업 등 등과 같은 부분적 정체성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인이 처한 삶의 각 상황마다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주도적인 부분 정체성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는 다면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Keupp이 정체성에 대한 작업을 ‘패치워킹’ 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Keupp 2002).

세계화된 새로운 자본주의는 정체성에 대한 작업에 하나의 커다란, 심지어는 종종 벽차기도 한 도전을 던져준다. 우리의 삶의 형태와 노동의 형태는 숨 막힌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람들의 노동

과 삶의 여정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표본들은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흐르고 있어, ‘유동적 사회’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Baumann 2000). 고정되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변동에 대한 가장 가시적 신호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구호일 수도 있다(Sennett 1998:25). 이러한 상황은 불안한 상태를 생성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신뢰와 의무의 구속은 해체되었으며, 자기 존중의 중요한 요소들이 침식되었다.’(같은 책: 38)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격변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정체성과 정상성을 고안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하면서도 아주 불안정한 바탕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전통적인 문화 공간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그냥 받아들이 수는 없게 되었다. 오히려 탐색하고, 실험하며, 변화할 자세를 갖추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근대는 인간의 삶에서 운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커다란 도약을 의미한다. (...) 전체적으로 볼 때, 근대의 다원주의적 조건에서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점점 자립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개인은 확고히 정립된 행동과 사고방식에 기댈 수 없으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 개인의 삶도 세계관과 정체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젝트,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련의 프로젝트들이 되어 가고 있다”(Berger 1994:95). 인간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만들어 가야만 한다면, 가능한 삶의 형태의 숫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정상성과 정체성에 대해 가능한 입장들도 증가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이주민들에게 특히 강하게 해당되며, 가족 구성원 간에 그리고 세대 간에 많은 갈등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별 역할분담이 변경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

중 가부장적인 규범과 가족 구조가 극복되지 못하고, 의식의 저변에 깔려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가문의 명예를 구하기 위한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삶의 방식과 가치의 다양성이 성공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지 못할 때 이들은 서로 충돌한다. 많은 이주민들은 그들의 익숙한 삶의 맥락에서 분리되었으며, 자존감과 인정의 상실에 직면한다. 바로 이렇게 고향, 익숙한 환경, 축적된 생활방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협받고 깨어진 정체성에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고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삶의(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사회가 특별한 학교 교육 및 학교 외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할 때만이, 광범위한 수준에서 볼 때 통합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종족적 민족적 정체성으로

종족이나 민족에 대한 소속을 통해서만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새로운 정치적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다.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국가라는 원칙이 흔들리게 되었다. 정치에서는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탈 국가화되고 있다. 경제생활이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많은 전쟁이 국민국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집단들 간에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 운동마저도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발전하고 있다. 종족과 국가 영토가 일치하지 않는 딜레마를 종족적으로 순수한 국가를 세우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정치적 시도들은 폭력과 전쟁을 초래하였을 뿐이었다. 대독일, 대세르비아, 대알바니아 등의 꿈들은 모두 실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국민국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근대의 발명품이다(Anderson 1996). 세계화의 추세에서 복잡한 국가 구조의 원칙은 침식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역사 속에서 전쟁, 이동, 결혼, 무역 등을 통해 많은 민족, 가족, 개인이 혼합되어 부분적으로는 우연하게 생성된 부산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질적인 하나의 민족이란 없으며, 타고난 문화적 단위와 동질적인 혈통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은 단지 신화에 불과하며 자주 정치

적인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이는 한국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가치세계는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중심적인 틀이다. ‘일정 정도는 내 정체성이 나의 도덕적 세계의 지평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정체성에 근거하여, 나는 내게 보다 잘 받아들여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나를 깊이 감동시키는 것과 주변적인 것에 불과한 것들을 알 수 있다’(Taylor 2002:271). 종족적·민족적 정체성 대신에 예컨대 민주주의의 전통과 인권과 같은 다른 가치와 전망이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모든 시민에게 ‘헌법애국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주민으로서의 한국인들에게 독일에서 존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필요한 가치나 전망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4. 전망 : 동등한 대우 및 차별반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정치적 평등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부담함을 줄여 가는 것이다. 이는 예컨대 교육의 모든 영역, 노동시장, 공공서비스 영역, 의료 서비스 및 정신 사회적 서비스, 언론에서의 표현, 정치적 이익 대변 등에서 이민 배경을 지닌 인간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기제를 모두 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을 향한 작지만 긍정적인 걸음으로는 새로운 동등처우법(2006년 8월 18일 발효)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고용, 직업, 일반 상행위(민법행위) 영역에서의 차별사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적인 규범의 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해도,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별의 피해자들에게 소송과 피해보상요구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실제로 차별에 대항하여 법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제들과 조건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5. 전망 : 관용, 존중, 인정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유럽사와 독일사에서 저절로 형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관용이 당연하게 여겨진 적은 없으며, 아직도 당연하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관용은 항상 위협에 처해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관용이 독일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도 없다. 분명 평화애호가나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조차 프랑스인 친구 볼테르와 함께 프로이센에서의 관용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것도 추상적인 관용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관용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의 선왕도 다른 곳에서 박해받는 위그노 교도들과 홀랜드인들을 프로이센에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 바 있다. 현재에도 관용은 여전히 매우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 다양성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상호문화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상호문화적인 능력이란 다른 문화를 만날 때, 감정 이입, 관용, 존중을 가지고 만나는 것,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하면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체계를 비판적으로 재고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관용은 함께 사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칠레 학자인 Humberto Maturana는 “관용을 요구하는 자는 사실은 부당하게도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타자에 대한 거절 혹은 타자에 대한 평가 절하를 약간 미루거나 연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 인간에 대해 단지 관용하는 자는 그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조용히 두지만, 그 등 뒤에서 끊임없이 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진정한 관심을 주지 않으며, 그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만이 전면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는 타자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를 절멸시키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준다. 이것이 바로 관용이다”(Maturana 2002: 47). 그는 관용 대신에 존중으로 타자의 세계관과 대면할 것을 제안한다. 사람들은 타자에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들의 현실에서 이를 받아들이며, 그 근본적인 정당성을 수용해야만 한다.

사회적 불평등의 맥락에서 Sennett는 왜 ‘존중’이 그렇게 드문 자산

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지도 않지만, 존중을 받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그 존재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되는 것이 아니다. (...) 또 사람들은 이 귀한 재료가 충분히 없는 것처럼 존중을 하나의 희귀한 자산으로 만든다. 이러한 존중의 희소성은 수많은 기아위기가 형성되는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식료품과는 달리 존중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부분에서 희소성이 널리 퍼져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Sennett 2002:12).

캐나다의 철학자 Taylor는 인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인정의 문화는 하나의 일관된 정체성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혹은 부인 그리고 종종 오인을 통해 각인되며, 주변이나 사회가 이들에 대해 제한적·경멸적·멸시적인 상을 재현할 때, 한 인간과 집단은 정말로 피해를 입거나, 기형화되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부인과 오인은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 억압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타자를 잘못되고 변형된 존재 안에 가두어 둘 수도 있다”(Taylor 1993:13).

상이한 문화를 가진 인간들이 타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사회가 직면한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다.

6. 전망 : 시민사회적인 활동

시민으로서 또 주체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하나의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서로 잘 이해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모두를 위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인간들 간의 신뢰로 유지된다. 사람들은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Interkulturelles Leben in der Migrationsgesellschaft

Dr. Chong-Sook, Kang Abteilungsleiterin

Pädagogisches Institut der Stadt München

1. Situation von koreanischen Migranten: Vielfalt und Ungleichheit

Etwa 6 Mio. Koreaner leben im Ausland (Juli 2003). Das entspricht etwa 11% aller Südkoreaner. In Deutschland leben etwa 30,000 KoreanerInnen.

„Der/Die Koreaner/in“ schlechthin gibt es nicht. Sie können nicht einfach nur aufgrund der Nationalzugehörigkeit einheitlich beurteilt werden. Es gibt eine Vielfalt von Lebensentwürfen und -formen der emigrierten KoreanerInnen in Deutschland, jeweils vor dem Hintergrund von unterschiedlichen Aufenthaltsstatus, Migrationserfahrungen sowie sehr verschiedenen sozialen Lebenssituationen und Kulturen.

Ein Kind in der dritten Generation betrachtet Deutschland als seine Heimat, während sich seine Großmutter immer noch nach Korea sehnt. Ein/e Koreaner/in kam zur Arbeit hierher, während ein/e andere/r vor der politischen Verfolgung floh. Jede/r Koreaner/in hat andere Probleme zu bewältigen und andere Lebenspläne zu realisieren. Es ist sehr wichtig, die Vielfalt der Lebenssituationen von KoreanerInnen differenziert wahrzunehmen.

Aber fast alle KoreanerInnen in Deutschland haben eine gemeinsame Erfahrung: durch ihre Lebensbiographie ziehen sich die Erfahrung der Fremdheit und die sich daraus ergebenden Konflikte in allen Stadien des Lebensprozesses wie ein roter Faden. Jede Migration und Flucht

bedeutet einen massiven Eingriff in das soziale gesellschaftliche Leben der Betroffenen und ihrer Familie. Neben der ständigen Auseinandersetzung mit und der Verarbeitung der Fremdheit ist im Leben vieler KoreanerInnen der ersten Generation die Frage „Verbleib oder Rückkehr“ von zentraler Bedeutung. Die Betroffenen stellen sich diese Frage selbst, aber sie spüren auch den Druck seitens der deutschen Gesellschaft, die diese Frage offen oder versteckt immer wieder aufwerfen. Die unbedacht gestellte Frage von KollegInnen oder FreundInnen, z.B. „Wann gehst du zurück?“ schmerzen viele KoreanerInnen sehr und erinnern sie immer wieder an ihr Nicht-hierher-Gehören.

KoreanerInnen erfahren wie alle MigrantInnen Diskriminierung auf dreierlei Weise:

- soziale und ökonomische Ungleichbehandlung
- gruppenbezogene Diskriminierung aufgrund der Hautfarbe, Religion, Kultur usw.
- politisch rechtliche Ungleichbehandlung.

Vielen Migranten wird trotz ihres langjährigen Aufenthalts durch Ausländerrecht und Staatsangehörigkeitsrecht immer noch ihr Recht als Bürger verweigert. Die Nicht-EU-Bürger haben nicht einmal das kommunale Wahlrecht. Wenn heute acht Millionen Einwohner kein Recht der politischen Partizipation haben, ist die Demokratie in Deutschland auf ähnliche Weise unvollendet wie sie es vor Einführung des Frauenwahlrechts Anfang des 20. Jahrhunderts war.

Auch sozial und ökonomisch ist die Lage der Migranten unterdurchschnittlich. Das zeigt die Arbeitslosen-Statistik sehr deutlich: Die Quote der Arbeitslosigkeit bei Ausländern 2004 war 20,5 % (allgemein lag sie unter 10 %). Fast drei Viertel dieser arbeitslosen Ausländer haben keinen beruflichen Abschluss. Unter deutschen Jugendlichen lag die Ausbildungsquote 2005 bei 58%, bei Jugendli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bei 24%. Die ausländischen Arbeitslosen sind zudem jünger als die deutschen: Der Anteil der unter 35jährigen lag 2003 bei den Türken bei 49,1 %. In der Gesellschaft sind Migranten mit Rassismus und Fremdenfeindlichkeit konfrontiert: Eine Studie der Friedrich-Ebert-Stiftung „Vom Rand in die Mitte“ berichtet von der Entwicklung zu rassistischer Einstellung. Die Zahlen belegen eine hochproblematische Situation besonders in Bayern: 42,4 % der Bayern (gegenüber 26,7% im Bundesdurchschnitt) stimmen ausländerfeindlichen Aussagen zu, 16,4 % (8,4 % im Bundesdurchschnitt) äußern sich antisemitisch, doppelt so viele Bayern verharmlosen den Nationalsozialismus wie es Deutsche im Durchschnitt tun (8,1 zu 4,2 %) und auch im Chauvinismus liegen die Bayern mit 34,2 % deutlich vor den 19,3 % der Bundesbürger insgesamt (SZ. 10.11.2006).

Nach der Shell Jugendstudie wünschen 58% der Jugendlichen weniger Zuwanderung nach Deutschland (Gensicke 2006: 170)

Es ist daher kein Wunder, dass sich 83% der deutschen Einwanderer mehr mit ihrem Herkunftsland als mit Deutschland identifizieren. In England findet sich diese Einstellung bei lediglich 19% der Minderheiten. Über 40% der Migranten in Deutschland interessieren sich mehr für die Politik in ihrem Herkunftsland als für die deutschen Politik. In Großbritannien sind dies nur 4 % (zitiert in Rommelspacher 2002: 166).

Die Migranten reagieren auf die Ausgrenzung z.B.:

- mit Community-Bildung bis zur Abschottung
- mit eigene Abgrenzung zu potentiell noch mehr diskriminierten Gruppen bzw. Statusniedrigeren (z.B. gegenüber Asylbewerbern)
- mit Hinwendung junger Migranten zum Islam auf der Suche nach eigener Kultur
- zum Teil mit delinquenten Verhaltensweisen.

2. Verschiedene Konzepte und Politiken zum Interkulturellen Zusammenleben

1) Die konservative Position betrachtet die einzelne ethnische bzw. kulturelle Gruppe als geschlossene Einheit. Sie sollen in ihren eigenen Einheiten bleiben ohne Austausch mit anderen kulturellen und ethnischen Gruppen. Dabei geht es nicht um ein gleichberechtigtes Zusammenleben unterschiedlicher Gruppen, sondern um die bloße Koordination verschiedener Gruppen unter der zentralen Macht (so blieben die Völker im Osmanischen Reich unter sich und die Juden in Europa in ihren Ghettos). Eibl-Eibesfeldt argumentiert damit, dass die Kultur der Hiesigen und der Einwanderer gleichermaßen beschädigt werde und deshalb Migration im Interesse beider Seiten abzulehnen sei.

Viele haben Sorge, dass in der Multikulturalismus in Deutschland die Entstehung von „Parallel-Gesellschaften“ der Migranten fördere. Vor diesem Hintergrund taucht seit einigen Jahren der Begriff der „deutschen Leitkultur“ in jedem Wahlkampf auf.

Gibt es die homogene deutsche Kultur? Soziologen haben in Deutschland eine Reihe verschiedener Milieu-Typen auf Basis der sozialen Lage und der Grundorientierung herausgearbeitet. Die Migranten sind in all diesen Milieus vertreten und teilen deren Kultur und Werte. Allerdings bewegen sich Migranten vor allem im konsum-materialistischen Milieu und im Milieu der Traditionsverwurzelten, die von ihrer sozialen Lage zur Unterschicht zu zählen sind. Die ethnische Zugehörigkeit spielt bei der sozialen Hierarchie eine entscheidende Rolle. Ein gewisser Teil der Migranten ist dem aufstiegsorientierten Milieu zuzurechnen, einige haben es über Bildung in das liberal-intellektuelle, aber erst sehr wenige in das etablierte Milieu geschafft.

Die Debatte über die Leitkultur, die oft die Übernahme deutscher Werte und deutscher Kultur suggeriert, ist zum Scheitern verurteilt. In großen Städten wie München haben etwa 30 % der Bewohner und über 40 Prozent der

Schulkinder einen Migrationshintergrund. Die Vorstellung einer nationalen Leitkultur in der Postmoderne ist daher obsolet.

Die Vielfalt von Kulturen ist keine ästhetische Frage. Dazu gehören auch materielle Fragen und die Vielfarbigkeit der Vorstellungen über Formen und Ausübungen von Bürgerrechten und Demokratien. Trotz der multikulturellen Realität bemüht sich die Mehrheit der einheimischen Etablierten ihre Hegemonie zu verteidigen und zu legitimieren – und das umso mehr je selbstbewusster die 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auftreten und ihren gerechten Anteil an den gesellschaftlichen Ressourcen einfordern. Die Mehrheit macht die Anderen drastisch zu Fremden und betont die Unvereinbarkeit zwischen den Kulturen.

Hinter konservativen Positionen in der Diskussion über Parallelgesellschaft und Leitkultur verbirgt sich oft die Annahme, dass die Identität den Charakter einer radikalen und unüberbrückbaren Kluft hat. Hier wird die Identitätsarbeit als Kampf um die Sicherung von Grenzen verstanden, die unveränderbar feststehen. Diese Art, die Andersheit zu einer Demarkationslinie deklarieren, führt oft zu Identitätskriegen und gelegentlich zu realen Kriegen. Heutzutage sind die meisten Kriege und Konflikte Resultate des Versagens, mit Differenzen und den daraus entstandenen Konflikten friedlich umzugehen.

2) Die liberale Position vertritt den Standpunkt, dass die allgemeinen politischen Prinzipien für alle Menschen gleichermaßen gelten. Alles andere spiele sich im Privatleben ab. Das öffentliche und Private sei zu trennen. Das Öffentliche ist aber keineswegs neutral, z.B. die Regelung der Feiertage. Jürgen Habermas unterscheidet daher zwischen Neutralität der Rechtsordnung und ethnischer Integration auf der Ebene von Gruppen. Er ist gegen Sonderregelungen für Minderheitengruppen („Artenschutz“). Dafür muss jedoch die Mitsprache der Minderheiten garantiert werden. Auch sollten die Inhalte der Rechtsordnung auf die Anliegen aller Gruppen achten.

3) Bezüglich der Interkulturalität spielt seit geraumer Zeit der Diversity-Ansatz eine große Rolle. Im anglo-amerikanischen Raum wird er

nicht nur im pädagogischen Kontext, sondern vor allem beim Personalmanagement diskutiert und angewandt. Der Diversity-Ansatz geht davon aus, dass bei der Identitätsbildung eines Menschen Teilidentitäten wie Gender, sexuelle Orientierung, körperliche Verfassung, Sprache, Religion, Ethnizität/Nationalität, Politische Orientierung, Sozialer Status, Alter, Arbeit, usw. zusammenwirken. Es gibt dominierende Teilidentitäten, die je nach der Lebenssituation stärker geprägt sind. Jeder Mensch hat dementsprechend verschiedene Facetten der Identität, die situativen Änderungen und immer einer Weiterentwicklung unterworfen sind. Die Identitätsarbeit nennt Keupp daher „Patchworking“ (Keupp 2002).

Der globalisierte neue Kapitalismus ist für die Identitätsarbeit eine große – manchmal sogar überwältigende – Herausforderung. Unsere Lebens- und Arbeitsformen ändern sich in atemberaubendem Tempo. Die Arbeits- und Lebensbiographie der meisten Menschen und auch die familiären Muster erfahren eine radikale Veränderung. Alles ist im Fließen, weshalb auch von einer „fluiden Gesellschaft“ gesprochen wird (Baumann 2000). Nichts erscheint mehr statisch, stabil und verlässlich. „Das sichtbarste Zeichen dieses Wandels könnte das Motto „nichts gilt langfristig“ sein (Sennett 1998: 25). Diese Situation erzeugt Angstzustände. „Nichts orientiert auf langer Sicht das Handeln, die Bindungen von Vertrauen und Verpflichtung werden gelöst, die wichtigsten Elemente der Selbstachtung untergraben,, (ebd. 38).

Andererseits entstehen im gegenwärtigen gesellschaftlichen Umbruch neue Chancen für eigenwilligen Identitäts- und Normalitätsentwürfe. Die Findung eines authentischen „Lebenssinns“ ist zur wichtigsten, aber auch prekären Grundlage der Lebensführung geworden. Niemand kann mehr einfach aus dem traditionellen kulturellen Raum allgemein geteilte Werte übernehmen. Gefordert ist vielmehr ein hoher Eigenanteil an Such-, Experimentier- und Veränderungsbereitschaft.

„Die Moderne bedeutet für das Leben des Menschen einen riesigen Schritt weg vom Schicksal hin zur freien Entscheidung. (...) Aufs Ganze gesehen

gilt..., dass das Individuum unter den Bedingungen des modernen Pluralismus nicht nur auswählen kann, sondern dass es auswählen muss. Da es immer weniger Selbständigkeiten gibt, kann der Einzelne nicht mehr auf fest etablierte Verhaltens- und Denkmuster zurückgreifen, sondern muss sich nolens volens für die eine oder andere Möglichkeit entscheiden. (...) Sein Leben wird ebenso zu einem Projekt- genauer, zu einer Serie von Projekten – wie seine Weltanschauung und seine Identität,, (Berger 1994: 95). Wenn man eigenes Leben gestalten kann, aber auch muss, wächst die Zahl möglicher Lebensformen und damit die möglichen Vorstellungen von Normalität und Identität.

Das alles betrifft besonders stark die Migranten und verursacht viele Konflikte und Unsicherheiten in der Familie und zwischen den Generationen. So verändern sich auch unter Migranten die Geschlechterrollen. Oft sind aber die patriarchalen Normen und Familienstrukturen nicht überwunden und untergründig wirksam. Dann kann es zu so krassen Handlungen, wie „Mord zur Rettung der Familienehre“ kommen. Vielfalt der Lebensmuster und Werte prallen aufeinander, wenn ihre Verknüpfung zu einer neuen Identität nicht gelingt. Viele Migranten sind aus ihren gewohnten Lebenszusammenhängen herausgerissen und mit Verlust von Selbstwertgefühl und Anerkennung konfrontiert. Gerade Verlust der Heimat, des gewohnten Milieus und der gewachsenen Lebensverhältnissen macht lernenden und wissenden Umgang mit bedrohter und gebrochener Identität zur (Über-)Lebensfrage. Das ist der Grund, warum Integration auf breiter Ebene nur gelingt, wenn die Gesellschaft dafür viele besondere schulische und außerschulische Angebote bereitstellt.

3. Zur ethnischen und nationalen Identität

Die Identitätsbildung allein durch ethnische oder nationale Zugehörigkeit passt nicht in die neue politische Entwicklung. Mit der Beschleunigung der Globalisierung gerät das Nationalstaatsprinzip ins Wanken. Politik wird entgrenzt und entstaatlicht. Das Wirtschaftsleben hat längst das nationalstaatliche Rahmen verlassen. Viele Kriege werden nicht zwischen

Nationalstaaten ausgetragen, sondern privatisiert. Gerade auch die Islamische Bewegung entwickelt sich global über die nationalstaatlichen Grenze hinaus.

Der politische Versuch, das Dilemma der mangelnden Übereinstimmung von Staatsvolk und Staatsterritorium durch ethnisch reine Staaten zu lösen, haben nur zu Gewalt und Krieg geführt. All die Träume von Groß-Deutschland, Groß-Serbien, Groß-Albanien, Groß-Sonstwie sind gescheitert und werden auch künftig scheitern.

Der Nationalstaat ist noch nicht sehr alt, sondern die Erfindung der Moderne (Anderson 1996). Im Zuge der Globalisierung ist dieses Prinzip der Staatsgefüge der Erosion ausgesetzt. Alle Bevölkerungen, die jetzt Nationen bilden, sind ein im Lauf der Geschichte teilweise zufällig entstandene Produkte der Vermischung vieler Völker, Familien, Individuen durch Kriege, Wanderung, Heirat, Handel usw. Es gibt kein homogenes Volk, keine angeborenen Kultureinheit, keine einheitliche Abstammung. Solche Konzepte sind nur Mythen und werden häufig politisch instrumentalisiert. Das gilt auch für KoreanerInnen.

Für die Identitätsbildung ist die Wertewelt der zentrale Rahmen. „Man könnte sagen, dass meine Identität in gewisser Weise den Horizont meiner moralischen Welt festlegt. Aufgrund meiner Identität weiß ich, worauf es mir mehr oder weniger ankommt, was mich tiefgreifend berührt und was eher nebensächlich ist“ (Taylor 2002:271). An der Stelle von ethnischen und nationalen Identitäten können andere Werte und Perspektiven übernommen werden, z.B. die Tradition der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Habermas fordert daher für alle Bürger „Verfassungspatriotismus“.

Welche Werte bzw. Perspektive brauchen KoreanerInnen als MigrantInnen als wichtigste Grundlagen für ihr Dasein in Deutschland ?

4. Perspektive: Gleichstellung und Antidiskriminierung

Es geht hierbei um den Abbau der Ungerechtigkeiten in der Gesellschaft

und zwar nicht nur um die politische Gleichheit. Vielmehr geht es um die Aufhebung aller gesellschaftlichen Ausschlussmechanismen für 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z.B. in allen Bildungsbereichen, auf dem Arbeitsmarkt, im öffentlichen Dienst, bei der gesundheitlichen und psychosozialen Versorgung, bei der Darstellung in den Medien, der Repräsentanz in der Politik usw.

Ein kleiner positiver Schritt in dieser Richtung ist das neue Gleichbehandlungsgesetz (das 18.08.2006 in Kraft trat). Es bezieht sich auf die Diskriminierungsfälle im Bereich Beschäftigung, Beruf und allgemeines Geschäftsleben (Zivilrechtsverkehr). Das garantiert noch nicht, fördert aber die Entstehung einer gesellschaftlichen Norm und gibt den Opfern von Diskriminierung die Möglichkeit der Klage und der Schadenersatzforderung. Doch die Voraussetzungen und Bedingungen dafür, dass sich Betroffenen tatsächlich gerichtlich gegen Benachteiligung wehren können, sind nicht in allen Fällen gegeben.

5. Perspektive: Toleranz, Respekt, Anerkennung

Anders Denkende, anders Gläubige zu tolerieren ist kein Selbstläufer in der europäischen und deutschen Geschichte gewesen. Toleranz war und ist nie selbstverständlich, sie blieb stets ein gefährdetes Gut. Aber glücklicherweise ist sie auch nie ganz aus der deutschen Geschichte verschwunden. Selbst Friedrich II in Preußen, bestimmt kein Friedensfreund oder Demokrat, setzte sich zusammen mit seinem französischen Freund Voltaire engagiert für die Toleranz in Preußen ein. Und zwar nicht nur für eine abstrakte, sondern für konkrete Toleranz für alle Untertanen im gesamten Staatswesen. Auch seine Vorgänger hatten die woanders verfolgten Hugenotten und Holländer nach Preußen geholt und ihnen dort Religionsfreiheit gegeben.

Auch in der Gegenwart ist Toleranz nach wie vor von großer Wichtigkeit. Die Gesellschaft der Vielfalt verlangt von jedem interkulturelle Kompetenz.

Das heißt, anderer Kultur mit Empathie, Toleranz und Respekt zu begegnen, bereit sein für den dafür notwendigen Perspektivwechsel, lernen, Widersprüche auszuhalten, sich mit dem eigenen Wertesystem auseinandersetzen usw.

Toleranz ist das Mindestmaß für das Zusammenleben – aber eigentlich zu wenig. Der chilenische Wissenschaftler Humberto Maturana sagt, „Wer Toleranz verlangt, der fordert eigentlich dazu auf, die vermeintlich angebracht erscheinende Ablehnung und Abwertung des anderen noch ein wenig hinauszögern und aufzuschieben. Wer einen Menschen lediglich toleriert, der lässt ihn für eine gewisse Zeit in Ruhe, hält aber stets, verborgen hinter dem Rücken, sein Messer bereit. Er hört ihm nicht zu, er schenkt ihm keine wirkliche Aufmerksamkeit, seine eigenen Vorstellungen und Überzeugungen stehen im Vordergrund. Der andere liegt zwar falsch. Aber man wartet noch ein bisschen mit seiner Vernichtung: Das ist die Toleranz,, (Maturana 2002: 47). Er schlägt stattdessen vor, der Weltsicht des anderen mit Respekt zu begegnen. Man solle ihm zuhören und sich auf seine Realität einlassen und ihre grundsätzliche Legitimität zu akzeptieren.

Im Zusammenhang mit der sozialen Ungleichheit wundert sich Sennett, warum „Respekt“ so ein knappes Gut ist. „Man wird nicht beleidigt, aber man wird auch nicht beachtet; man wird nicht als ein Mensch angesehen, dessen Anwesenheit etwas zählt....., macht sie (die Gesellschaft) zu einem knappen Gut, als gäbe es nicht genug von diesem kostbaren Stoff. Wie viele Hungersnöte, so ist auch diese Knappheit von Menschen gemacht; aber im Unterschied zu Nahrungsmitteln kostet Respekt nichts. Insofern stellt sich die Frage, warum auf diesem Gebiet Knappheit herrschen sollte“ (Sennett 2002: 15).

Der kanadische Philosoph Taylor verwendet den Begriff der Anerkennung. Die Kultur der Anerkennung ist für die Entwicklung einer kohärenten Identität eine derart wichtige Voraussetzung: „dass unsere Identität teilweise von der Anerkennung oder Nichtanerkennung, oft auch von der Verkennung durch

die anderen so sehr geprägt wird, dass ein Mensch oder eine Gruppe von Menschen wirklich Schaden nehmen, eine wirkliche Deformation erleiden kann, wenn die Umgebung oder die Gesellschaft ein einschränkendes, herabwürdigendes oder verächtliches Bild ihrer selbst zurückspiegelt. Nichtanerkennung oder Verkennung kann Leiden verursachen, kann eine Form von Unterdrückung sein, kann den anderen in ein falsches, deformiertes Dasein einschließen“ (Taylor 1993: 13).

Die Herausforderung für die Gesellschaften des 21. Jahrhunderts wird es sein, mit den Menschen mit unterschiedlichen Kulturen offen, tolerant und mit Respekt vor und Anerkennung von Anderen zu leben.

6. Perspektive: Zivilgesellschaftliches Engagement

Um die Anerkennung als Bürger und Subjekt zu erlangen ist die Zivilgesellschaft eine wichtige Voraussetzung. Die Zivilgesellschaft lebt vom Vertrauen der Menschen in ihre Fähigkeit, im wohlverstandenen Eigeninteresse gemeinsam mit anderen die Lebensbedingungen für alle zu verbessern. Man sorgt für sich selbst und für andere. Man versetzt sich in die Lage, selbst Entscheidungen zu fällen und die Kontrolle über die eigenen Lebensumstände auszuüben. Die Gesellschaft, in der man lebt, stellt die Bedingungen her, die dies allen ihren Bürgerinnen und Bürgern ermöglicht.

<Literatur>

- Anderson, Benedict (1996), Die Erfindung der Nation. Frankfurt
Bauman, Zygmunt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Berger, P (1994), Sehnsucht nach Sinn. Glauben in einer Zeit der Leichtgläubigkeit. Frankfurt
Gensicke, Thomas (2006), Zeitgeist und Wertorientierungen. In Shell Deutschland Holding (Hrsg.). Jugend 2006. Eine pragmatische Generation unter Druck. Hamburg

- Habermas, Jürgen (1993), Anerkennungskämpfe im demokratischen Staat. In : Amy Gutmann (Hg.) Multikulturalismus und Politik der Anerkennung. Frankfurt
- Keupp, Heiner (2002), 2. Auflage, Identitätskonstruktion. Das Patchwork der Identitäten in der Spätmoderne. Hamburg
- Maturana, Humberto / Pörksen, Bernhard (2002), Vom Sein zum Tun. Die Ursprünge der Biologie des Erkennens. Heidelberg
- Rommelspacher, Birgit (2002), Anerkennung und Ausgrenzung. Deutschland als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Frankfurt
- Sennett, Richard (1998), Der flexible Mensch. Die Kultur des neuen Kapitalismus. Berlin
- Sennett, Richard (2002), Respekt im Zeitalter der Ungleichheit. Berlin
- Taylor, Charles (1993), Multikulturalismus und die Politik der Anerkennung. Frankfurt
- Walzer, Michael (1998), Über Toleranz. Von der Zivilisierung der Differenz. Hamburg